

오염수 악재에도 잘나가는 전남 수산물

지난해 전남 수산물 위판금액 1조7892억...전년보다 2265억원 ↑ 전남 6개 조합 위판금액 10위 내 포진...민물장어양식 전체 1위

전국 수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는 전남이 지난해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판량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계는 지난해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어종 집단 폐사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 잇따른 고물가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예측을 내렸지만 전남지역 수산물 위판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수산물 위판금액은 총 1조 7892억원으로 전년(1조 5627억원) 대비 2265억원(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량은 56조283억 t으로 전년(57조3903억 t) 대비 1조2620억 t(2.2%) 줄었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어종자원 감소 등 여파에도 다행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수협은 전남지역의 경우 수산물 공급량이 줄었지만, 수요가 증가하면서 김, 멸치, 조기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위판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에 소재한 17개 수협 중 12개 수협은 전년 대비 위판 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위판량과 위판금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위판량은 총 110만 5846 t으로 전남(56만1283 t)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위판금액 역시 전국 4조6767억원 중 전남(1조7892억원)이 40%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수산물 시장의 약진에는 서해 수산물의 위판금액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위판실적 상위 어종 현황을 보면 김이 위판금액이 가장 높았고, 뽕장어, 갈치 등 서해 수산물이 모두 상위에서 기록됐다. 서해 수산물의 위판금액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김은 위판금액이 6153억원에 달해 전년(4613억원)에 견줘 33%나 성장했다.

또 지난해 전국 조합 내 77개 수협을 통틀어 전남지역 수협들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수협 중 6개가 전남지역 수협이었으며, 위판 금액 1위를 기록한 수협 역시 전남지역 소재 수협이었다.

전남에 위치한 민물장어양식 수협은 지난해 위판금액만 3270억원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위판 금액을 기록했다. 이어 제주어류양식수협(2654억원), 여수수협(2282억원), 고흥군수협(1971억원), 목포수협(1860억원) 순으로 위판 금액이 많았다.

반면 강원·경북 등 동해안을 맞댄 지역에서는 17개 수협 중 14개 수협에서 위판금액이 줄어드는 등 수산물 시장이 부진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대표 어종 중 하나인 오징어류의 위판량 및 위판금액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오징어류 위판량은 총 2만4660 t으로 전년 대비 1만3365 t(-35.14%) 감소했고, 위판금액 역시 519억원 줄었다.

수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각종 경영비 부담 등의 악조건에도 수요 증가에 따른 위판량 증가로 위판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수산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이 어려운 어업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농부 올리는 '가짜 농업인'

직불금 등 노린 농업경영체 증가...농업인 요건 두고 견해차

최근 농가 인구감소에도 대도시 농가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가짜 농업인'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성한 농사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 황당한 일이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보면 ▲1000㎡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 ▲농업경영체로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 판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가 규정한 진짜 농업인의 요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농가 인구는 231만 명 정도라고 한다.

가짜 농업인 논란은 역사나 돈 문제에서 비롯됐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직불금과 세급감면 등을 노리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이들이 생겨났고, 불법으로 태양광발전 우대 혜택까지 받은 파편지한도 속속 발각되고 있다. 농사를 업으로 삼는 생계형 농업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의문과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농산물 작황이나 시세로 속앓이하는 일 없이 막대한 '취미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도 직불금과 세급감면 등 농업인 혜택이 똑같이 주어지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공익직불제를 놓고 벌이는 비위 정도로 가벼이 취급할 수 없을 것도 현실이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농가 인구 감소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미래농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생활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농촌에 터를 잡는 광경은 이미 낯설지 않고, 미래의 희

망을 일굴 청년농을 키워내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잣대를 대고 흑백만을 논하는 것은 신규 농업인의 유입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정교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회의에 '미래농업 대응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끈다. 정책 대상으로 삼을 농업·농업인 기준을 개별법과 제도에서 더 명확히 한다는 전제로 ▲법률상 농업경영체 정의 재정립 ▲수직농장·푸드테크 등 다양한 농업방식을 농업범위에 포함 ▲영농 미정착 청년·신규 귀농인 등에 대한 인정 기준 마련 ▲농외소득 개념 재확립 ▲농업인 사업자등록 활성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범위·분류 체계 개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하면 농업직불금을 받는 농업경영체는 단순히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농업인이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영체로 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과정에서 가짜 농업인 논란을 낳는 직불금 불법지대와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을 넘거나 농지가 아닌 초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 등으로 직불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도 가리는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참에 사람과 기술·환경이 빠르게 변화는 농촌의 현실에 맞는 농업·농업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이뤄질지 바라며, 가짜 논란을 해소할 변곡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gkim@kwangju.co.kr

설 성수기 계란 30% 할인...신선란 수입 확대 계획

7158원→6100대로 하락 2월8일까지 할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기준 특란 30구의 소매가는 7158원을 기록해 전월(6283원)대비 13.9% 올랐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 11일~2월 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할인지원의 영향으로 소비자가격은 지난 11일부터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여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계란 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11일까지 산란계 267만



강추위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세로 계란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한 대형 마트에서 시민들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마리의 3.5% 수준이나 AI 추가 발생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가

쌀값 안정화 대책에도 멈추지 않는 하락세

9회 연속 하락...3달 새 10% ↓

지난해 산지 쌀값이 출하와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다양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4만9164원(20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20kg·4만9408원)에 견줘 0.5% 하락한 수치로, 산지쌀값은 수확을 앞둔 지난해 10월 5일 20kg 당 5만4388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9연속 하락세를 걸어 3달 새 10%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공매 미실시, 산물벼 전량 인수, 정부양곡 40만 t 사료용 처분, 민간재고 해외 원조 용 5만 t 매입 등의 대책을 통해 쌀값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에도 산지 농가 또는 지역농협에서 벼를 매입해야 할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 업체들은 재고부담 및 쌀값 하락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벼 매입은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벼를 출하해야 하는 지역 농가의 벼가 지역 농협에 쌓이게 되면서 농협에 머무는 벼 재고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